

# 북한-우크라 교전 임박...러 “쿠르스크 탈환” 5만 병력 집결

“북한군 일부, 기초 보병전술·참호전 훈련” 정면 공격 투입 시사 ‘전선이 국경 될 수도’ 우크라, 점령지 쿠르스크 사수 총공세 예상 트럼프 종전구상 속 바이든 “퇴임 전 지원금 전액 우크라 도울 것”

러시아의 공세 확대 계획에 따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 교전이 며칠 내로 다가왔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보가 전해졌다.

취임 직후 종전을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은 전선을 따라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대규모 병력의 진격이 며칠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만명 이상 규모로 파악되는 북한군은 쿠르스크 서쪽 끝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군복과 기관총과 저격소총, 대전차 미사일, 로켓 추진 수류탄 등 장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러시아군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부대에서 싸우며, 장갑차 지원은 받지 않고 경보병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에서 포병 사격, 기본 보병 전술에 더해 참호전 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북한군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쿠르스크는 자국 영토 방어에 주력하던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점령한 러시아 서남부 지역으로, 한때 1천km가 넘는 면적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병력이 동부 전선에 매여있는 탓에 쿠르스크 탈환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완전 탈환에는 실패했다. 러시아가 이번엔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확보한 북한군 등 5만명은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한 병력으로, 러시아는 쿠르스크 등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동

시에 압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바로 끝내겠다고 장담한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황은 격화일로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 영토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압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미 통화를 하고 전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전선이 국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조급해진 상태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 본토 점령지를 사수하면서 적을 한치라도 더 물러나게 하기 위한 총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할당된 모든 지원금을 ‘적시에 전액’ 지출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예정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쿠르스크에서 승기를 잡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전 격화는 불가피하다.

이미 여러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한 러시아군에서는 하루 1200여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10일 새벽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45대의 공격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6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 84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10일 새벽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 푸틴 “북한 전쟁시 군사원조” 조약 서명

비준서 교환 땀 무기한 발효...북한군 파병 등 안보위협에 구실 활용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조약 제4조가 핵심으로 꼽힌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10일 새벽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주택, 차량 등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땡큐 트럼프”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6.22% 오른 8만1110.99달러 이더리움·도지코인도 ‘경풍’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10일 오후 1시 25분 기준 비트코인 1개 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22% 오른 8만 1110.9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께 사상 처음으로 8만달러를 넘은 데 이어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인 5일 7만 5000달러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 6000달러선, 8일에는 최고점을 7만 7000달러 위로 올렸다.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전날 3000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6% 넘게 오른 3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워

온 도지코인도 이날 오후 40% 넘게 급등해 0.30달러를 찍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현 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2기에서는 가상화폐가 상당히 육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여러 가상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친(親)가상화폐(crypto-friendly) 규제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측근 모임(inner circle)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 독일 조기총선 급물살...솔츠 총리 “연내 신임투표” 수용

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로 입지가 흔들려온 올라프 솔츠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야당 압박 끝에 연내 신임투표에 동의하면서 조기총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솔츠 총리는 이날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주요 정당들이 동의한다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 역시 그것이 신속히 이뤄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솔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앞서 제시했던 일정을 3주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솔츠 총리가 이끌던 신호등 연정은 경제 정책을 두고 내홍을 빚던 끝에 지난 6일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된 것을 기점으로 사실상 붕괴했다. 이에 따라 솔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신임투표를 진행한 뒤 3월 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신임투표를 더 빨리 진행해 내년 1월에는 조기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 기독교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8일 원내 회의에서 솔츠 총리가 신임투표를 두 달 미루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는 13일 신임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 신임투표는 조기총선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의회에서 총리 신임투표를 진행해 부결될 경우 정당들은 조기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연정 붕괴로 의회 내 사민당 등 여권의 의석은 과반(367석 이상)에 미달하는 324석에 불과해 신임투표안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